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9/ 13 통권 1640호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문화(文化)는 문화(雯火)다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술인정 사전신청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교제가 인정 된다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술인정 사전신청
-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 시 해당 영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한 것 인지로 국내공급·국내원천소득여부 판단함 (p.11)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과거 법인설립시 명의신탁주식의 현재환원방법

(주당액면가 5천원, 현재 평가액 10배라 가정함)

개념, 구분	과거 명의신탁 증여	현재 주식양도 방법
정의, 방법	실제 사실대로 증여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 방법 (편법)
적법성 문제	거래사실본질대로 적법함	과거 명의신탁입증 안되는 경우는 편법임
가격상환	당시 액면가 5000원, 1000주	현시세 50,000원, 1000주
본세	증여세 $5,000 \times 1000 \text{주} \times 10\% = 500,000 \text{원}$	시가 50,000 - 원가 5,000 = 45,000원 $\times 1000 \text{주} \times 10\% = 4,500,000$
무신고가산세	$50 \text{만원} \times 20\% = 100,000 \text{원}$	없음
미납부가산금	일별 $0.03\% \times 365 = 10.95 \rightarrow 11\%$ 가정 $50 \text{만원} \times 10 \text{년} \times 11\% = 550,000 \text{원}$	없음
총세금	$115 \text{만원} (= 50 + 10 + 55)$	450만원
유 · 불리	주당평가액 낮은 경우 불리 명의신탁기간 짧으면 유리	주당평가액이 높은 경우 불리 결손 등으로 액면시세이면 유리
문제점	거래된 사실이므로 문제없음 (과거 명의신탁의 부인 가능성)	명의신탁 환원 주주간에 대금수수 입증 없는 경우 (현 시세대로 환원증여로 볼 가능성 있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40호 / 주간 37호

2023. 9. 13.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과거 법인설립시 명의신탁주식의 현재환원방법 (주당 액면가 5천원, 현재 평가액 10배라 가정함)	표지
C E O 에 세 이	문화(文化)는 문화(文化)다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외화(USD)로 중장비 구입시 환율 - 우수사원 포상 내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 여부 -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문의 - 공장 건축물 내 보일러 교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인정 된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 -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줄어드는 프랑스식 세법 개정안 발의	8 9
직장인 Survival	16가지 부자되는습관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영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법규법인-3918, 2023.03.08)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전자세금계산서 제대로 받았나?... 의심될 때는 국세청 홈택스 '클릭'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시 해당 영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한 것인지로 국내공급·국내원천소득여부 판단함	11
세무정보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술인정 사전신청 -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4 20 34 39 41 43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문화(文化)는 문화(雯火)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이제는 ‘문화경영의 시대’다. 산업화 초기에는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양의 경영시대였다. 그러나 이내 질의 경영시대로 진입해야 했다. 품질에 더해 디자인도 중요해졌다. ‘창조경영’과 ‘천재경영’이 화두가 됐다. 이제 베끼기만 해서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창조는 성실한 노력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래서 에디슨도 “발명은 99%의 땀과 1%의 영감”이라고 했다. 1%를 겨냥해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 사람의 천재가 절실하다. 하지만 역사상 수많은 천재는 죽은 후에야 증명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천재(?)와 영웅CEO(?)가 열매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월가 스타일이 도마 위에 놓였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떼돈을 긁어대던 금융공학자들도 출지에 파산했다. 애초에 그런 영웅과 천재는 없었던 것이다. 세계최고권위의 노벨상위원회도 결국 속은 꼴이 됐다. 현실적으로는 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범재(凡才)들을 지원하는 게 허황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 범재가 천만 명이 되면 남북통일이 무섭지 않다.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는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됐다. 그는 학사출신으로 너무나 평범한 샐러리맨 연구원이자 아니었다.

‘창조나 천재’보다 더 세심하게 고객의 마음을 살피는 게 현명하다. 그것이 ‘문화경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구매욕을 자극시키고 싶다면 의당 고객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얻고 싶은 CEO라면 우선 그들 마음을 읽어야 한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정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회교도 아랍의 바이어와 친분을 쌓으려면 삼겹살집은 피해야 한다. 그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의 지적처럼 일본인들은 공간의 효율성과 품질을 가장 중요시 한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구는 약1억3천만 명으로 미국영토의 4%에 지나지 않은 공간에 미국의 33%에 이르는 인구가 산다. 한편 미국인은 완벽함에 빨리 실증을 낸다. 미국인은 3년마다 새 자동차를 원하고 5년마다 새 텔레비전을 구입하려 한다. 미국인들에게는 ‘완벽한’ 자동차가 쓸모없다. 새 차로 바꿀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려면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그 문화에 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文化)는 문화(雯火)다. 구름 문(雯)이며 불 화(火)다. 인류의 문화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불의 사용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스 신화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창조하라고 했다. 그는 흙을 물로 반죽해서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기독교의 성경과 일맥상통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직립자세를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태양과 구름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는 또 하늘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여 다른 동물을 정복했다. 또 도구를 사용하여 경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제우스는 그를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다.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신이기에 다시 살아난다. 문화는 그래서 하늘과 구름, 물과 불로 비벼진 인류 역사의 DNA라고 할 수 있다. 홍수, 경작, 가공할 핵무기, 인공위성. 그것은 오늘의 하늘과 물과 불의 모습이 아닌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일 (금)	9월 4일 (월)	9월 5일 (화)	9월 6일 (수)	9월 7일 (목)
미	달	러	(USD)	1322.30	1319.20	1319.30	1324.30	1332.60
일	본	엔	(JPY)	908.64	902.94	900.45	897.86	902.63
영	국	파운	(GBP)	1675.68	1660.74	1666.08	1664.65	1665.55
캐	나	다	(CAD)	978.65	970.25	970.57	970.97	977.09
홍	콩	달	(HKD)	168.60	168.14	168.39	168.89	169.92
중	국	원	(CNH)	181.35	181.77	181.37	181.65	182.04
유	로	화	(EUR)	1433.77	1421.64	1424.25	1420.44	1429.08
호	주	달	(AUD)	857.45	851.02	852.63	844.70	850.60
싱	가	폴	(SGD)	978.50	974.05	973.65	973.00	977.09
말	레이	시아	(MYR)	284.98	283.85	283.42	284.03	285.11

외화(USD)로 중장비 구입시 환율

Q 폐사는 국내 법인과 매매약정을 맺고 중국산 중장비를 구입예정(인코텀즈 DDP조건)입니다. 이때 대금은 USD로 지급합니다. 계약시 30%, 중도금(선적시) 50%, 잔금(인도후) 20% 계약금 30%는 선물환계약 후 지급하며, 중도금/잔금은 수금한 USD로 지급예정입니다. 이때 각각 USD환율은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선물약정환율? 지급일 매매기준율? 수금일 매매기준율? 지급일자의 매매기준율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요?

A 1. 법령에 의해 차량과 별도로 구매하는 채권(공채)은 차량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매도가 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대행사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제의 공급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법인간 국내에서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공시하는 공시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수사원 포상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됨

Q 당사 복리후생 제도 중 분기별 1명씩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포상으로 제주도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직접 예약(약정된 호텔)하고 항공권은 개인이 선결제 시 개인에게 송금 또는 회사에서 항공권 직접 예약) 이럴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A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문의

Q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면세서 제출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3월 정년이 되어 퇴사한 직원을 3월부터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였습니다. 단기간 근로를 목적으로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상용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 신고하여야 했으나, 계속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습니다.(3월부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하였음)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국세청 문의시 일용직 지급조서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 제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 지급명세로 신고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문제(가산세 등)는 없는지?

A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므로, 3월10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일용직을 계속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가산세 등의 문제는 없으나 4대보험은 일반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장 건축물 내 보일러 교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

Q

공장 건축물 내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신규 보일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납부 및 자산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축물의 상각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비품 등으로 보고 별도의 상각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선비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별도의 개별자산으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품으로 반영하고 별도로 상각해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인정 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사규에 의해 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예전과는 달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추세이다 보니 집(부동산)의 공동명의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매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또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당연히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원천세과-502, 2011.08.18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 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귀 질의회신문(서면1팀-52, 2006.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이 아닌 장거리 시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시외출장에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실제 시외출장에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자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단독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이나 그 밖에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자신과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량을 소지한 직원이라고 누구에게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직원)이 자기소유(본인 단독명의)의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④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명의 차량		불 가
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차량	가 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 가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일시적 2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대상 요건

구분	요건
①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② 상속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다만, ③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⑥ 소액 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이 없음
③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 1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④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⑥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지역(강화군·옹진군·연천군)]



정부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 2022년 12월 21일 이후 거래 소급적용



자녀 많을수록 소득세 줄어드는 프랑스식 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개정안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인 경우 과세표준의 4% • 2자녀인 경우 과세표준의 3% • 3자녀인 경우 과세표준의 2%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인 경우 56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 • 2자녀인 경우 42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 3자녀인 경우 28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자녀인 경우 5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2자녀인 경우 47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 • 3자녀인 경우 4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주식 양도세 과세 비교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	비과세(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엔 과세)	-
장외거래	과세	과세(K-OTC 중소기업 등 거래는 비과세)



16가지 부자되는습관

다음은 부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자 습관입니다.

1. 여유롭게 살자
2.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3. 매일 읽으십시오
4. TV는 잊어버리고 인터넷 서핑에 시간을 덜 투자하세요
5.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6.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 봉사하십시오
7. 일과 사업에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십시오
8. 소원이 아닌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9. 미루지 마십시오
10.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11. 유독한 사람을 피하십시오
12. 포기하지 마세요
13. 당신을 억제하는 자기 제한적 신념을 제쳐두십시오
14. 멘토를 구하십시오
15. 어휘에서 "불운"을 제거하십시오
16. 주요 목적을 파악하십시오

대부분이 습관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부자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성공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습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당신이 부를 축적 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부를 달성하면 돈보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규율 은 이러한 모든 자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테이크 아웃을 주문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사를 요리하는 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저축하는 데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더 나은 습관과 더 많은 규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나 저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시 해당 영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한 것인지로 국내공급·국내원천소득여부 판단함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영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242, 2023.03.30

질 의

-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받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한 것인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인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영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영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계약체결 경위·실제 영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사전법규법인-1254, 2023.03.08

질 의

-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를 하고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의 해외 거래처(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증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사전법규재산-1003, 2023.01.31

질 의

- 1주택 보유 1세대 내 기존주택 보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고 다른 세대원이 그 지방 저가주택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8④(3)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회 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서면법규법인-3918, 2023.03.08

Ⅰ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1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
(2안)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Ⅱ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

Ⅰ 질 의

-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매매대금이 사후 조정됨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 지급 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했던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 회수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시 매매대금 사후정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잠정 확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적정여부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양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매매대금 사후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계약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 등 제반사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제대로 받았나?... 의심될 때는 국세청 홈택스 '클릭'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신동근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안규백, 양기대, 이상현, 정일영, 조오섭, 홍석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1년 연장'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적용되도록 1년 연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김형동, 노용호, 박대수, 백종현, 윤상현, 이용, 이인선, 최춘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2023. 9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 → 거래 당사자 동의 →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 도입 배경
 -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을 조회하는 경우,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 이제부터는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승인번호, 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 공급가액, ⑤ 작성일자

-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 「간편조회 서비스」 주요 내용
 -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 제3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손택스(앱)로 이동하고 로그인을 하면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발급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조회결과) 조회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XX년 X월 X일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II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 도입 배경(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민생경제지원분과 추진과제)
 -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 이제부터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수정(취소)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① 발급사실을 확인한 후 ②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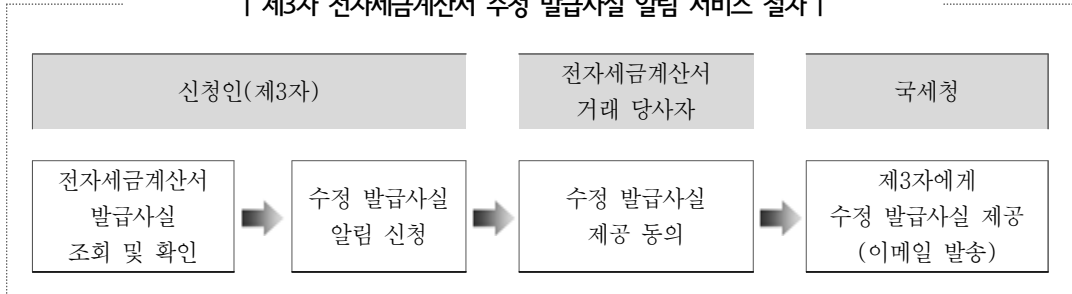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됨

- ◆ 제3자의 서비스 신청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 거래 당사자의 동의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

|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이용 방법

1. 제3자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방법(홈택스)

①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경로>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에서 5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사실 확인

③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 후 하단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클릭

① '수정 발급사실 알림신청' 클릭

- ② 정보제공 동의자 선택(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 ③ 정보제공 동의자의 이메일 주소 입력
- ④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입력
- ⑤ 신청인의 성명(상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 동의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내역 관리' 클릭

2. 정보제공 동의자 동의·비동의 처리 방법(홈텍스)

'전자(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클릭

- 신청인의 정보와 전자(세금) 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여 동의 또는 비동의 처리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신청인의 이메일로 알림 발송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 이메일로 '수정 발급사실' 발송

IV 주요 질의응답 (Q&A)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제3자(국가기관 · 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로, (재화 · 용역) 공급자 또는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의미
- ◆ 제3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의 자를 의미

Q2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Q3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됩니다.
- ※ 이용 경로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및 수정 발급사실 알림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처리
 - 손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Q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나요?

-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 제공내용 : 20XX.X.X. 에 알림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 하였습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 건가요?

-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닙니다.
 - ⇒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 1.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A)
- '23. 2. 1. A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B)
- '24. 1. 5. B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C)
 - ▶ 전자세금계산서 A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 한 경우
 - ⇒ '23. 2. 1. 의 수정 발급사실 만 알림 제공

Q6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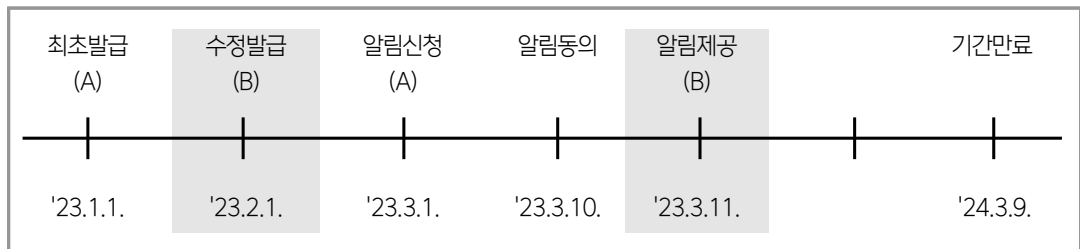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7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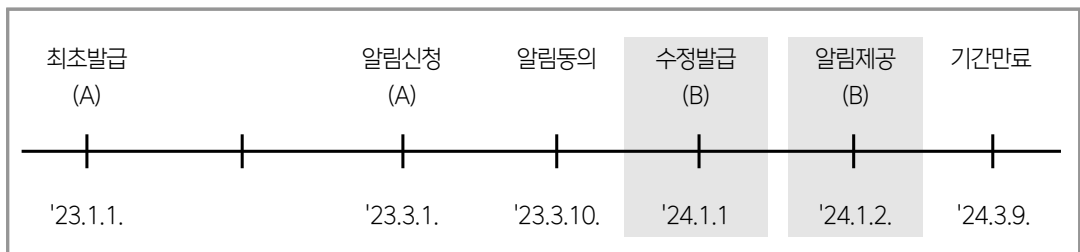
-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합니다.
- ① 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 제공

<수정발급 알림 사례>

-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3.2.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 ▶ '23.1.1. 전자세금계산서 1백만 원을 발급(A)하고, '24.1.1. △1백만 원으로 수정발급(B)한 경우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국세청, 2023. 8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 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검증 대상)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 ②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 ③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 ④ (기타 세법위반)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 (향후 계획)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 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3.28.)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 홈택스에서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 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
 -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22년)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상반기 검증 결과

-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
 -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 하였으며,
 -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318억 원) 하였습니다.
-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3

2차 공익법인 검증 계획

-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하여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 ①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 ②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 ③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
 -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 ④ (특정계층 혜택제공)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게 공익사업 혜택 제공
- ⑤ (공익자금 사적유용)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하여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
 -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및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 ⑥ (허위 인건비)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상증세법 §48⑧ 위반)
 -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 ⑦ (기타 의무위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 등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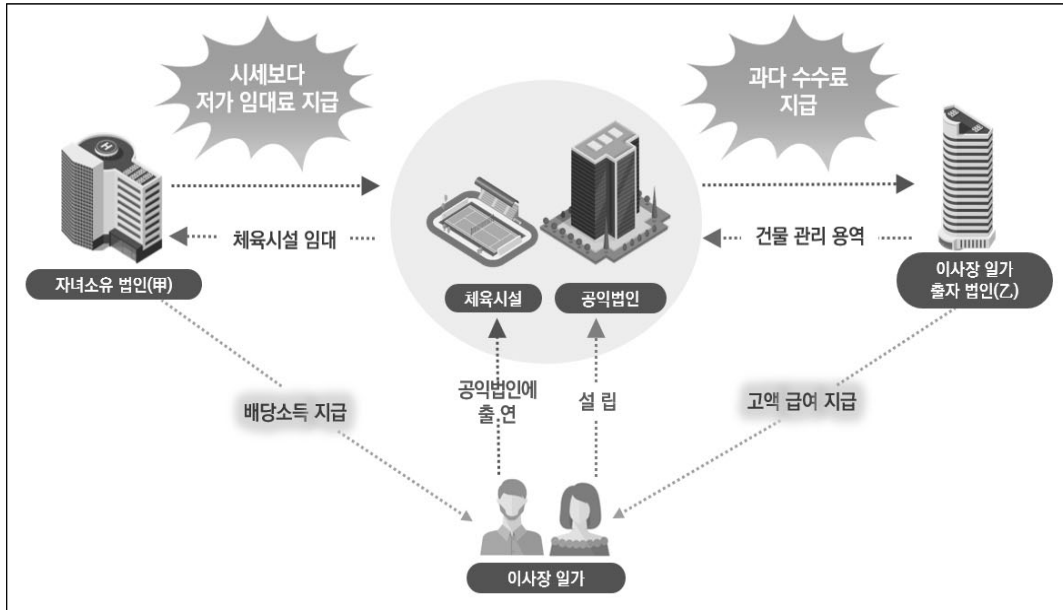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한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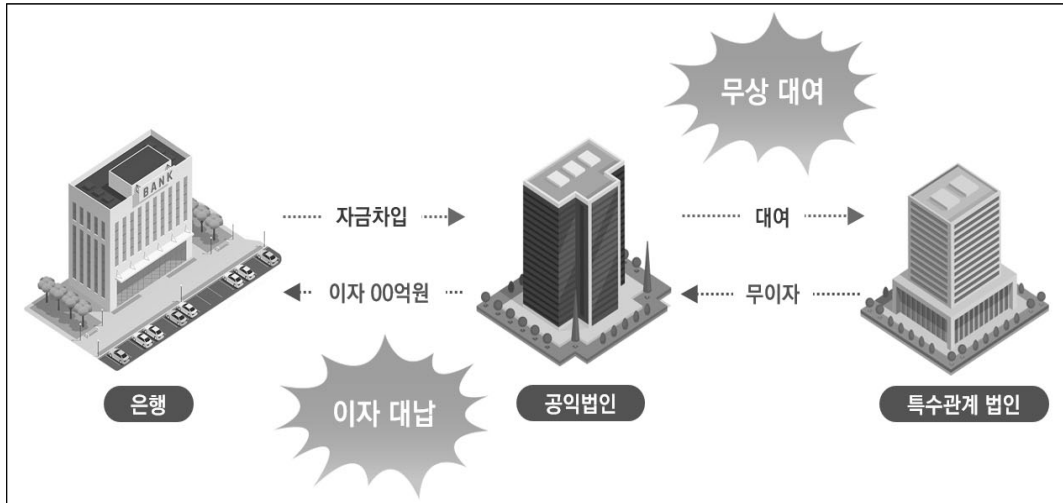
사례 1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부당 내부거래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로 과다 지급



□ 주요 혐의내용

-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여
 - －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 －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乙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p>사례 2</p>	<p>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p>
<p>부당 내부거래</p>	<p>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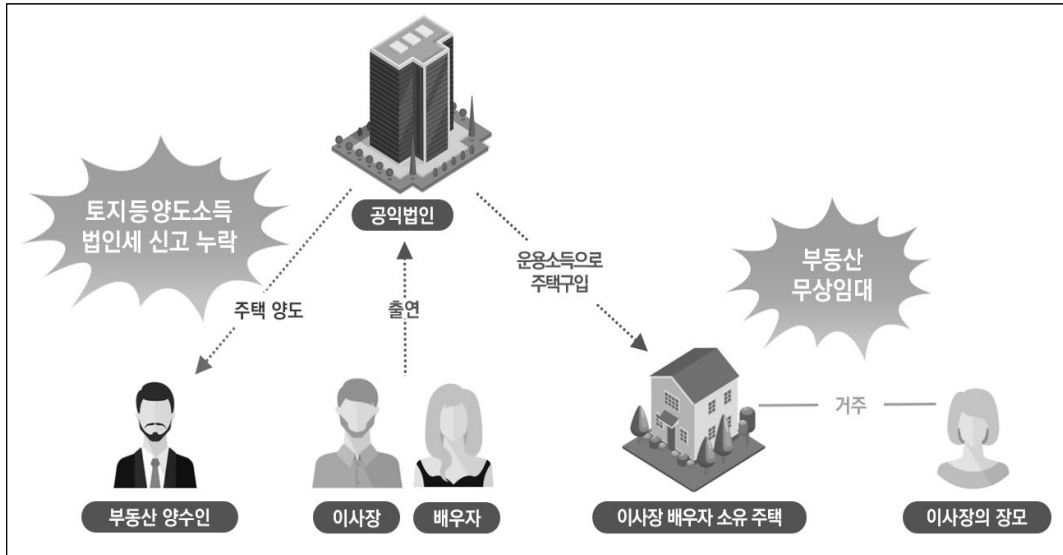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
 -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
- (공익법인 소득 축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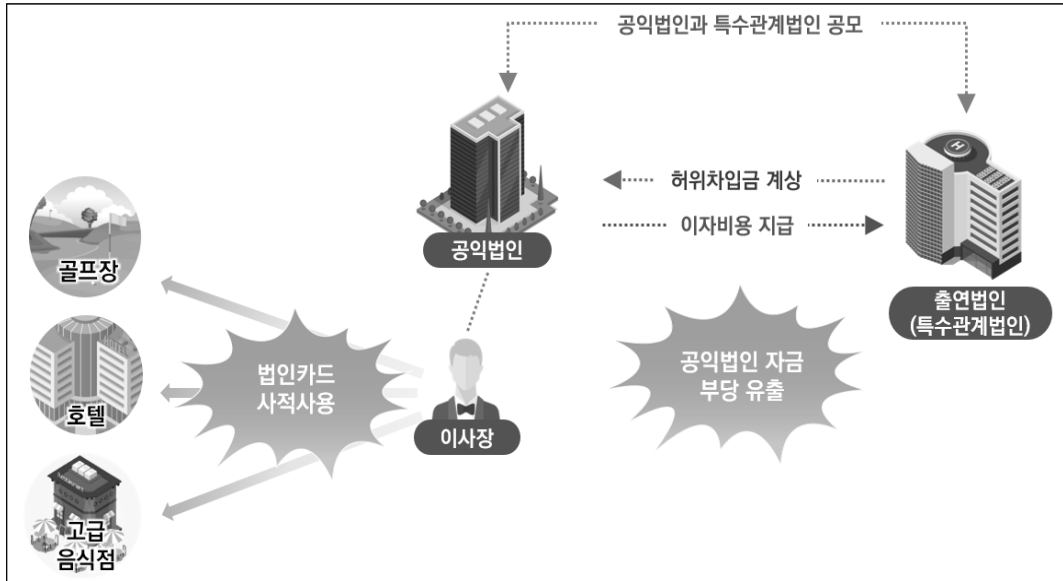
사례 3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부당 내부거래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주요 혐의내용

-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
 - －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여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 (양도차익 법인세 누락)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
 - －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p>사례 4</p>	<p>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p>
<p>변칙 회계처리</p>	<p>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익법인 카드 사적사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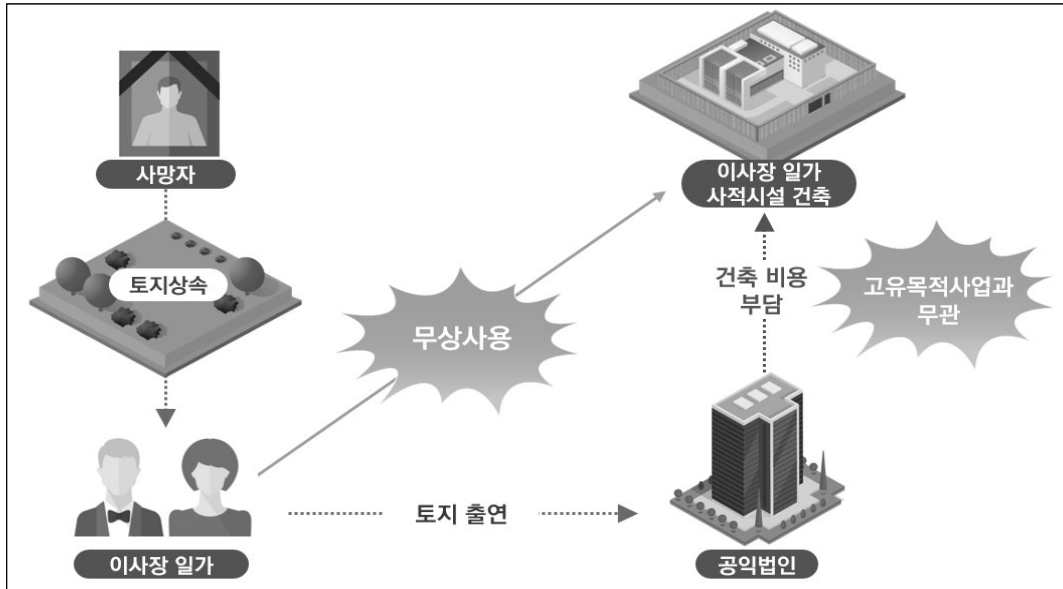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 －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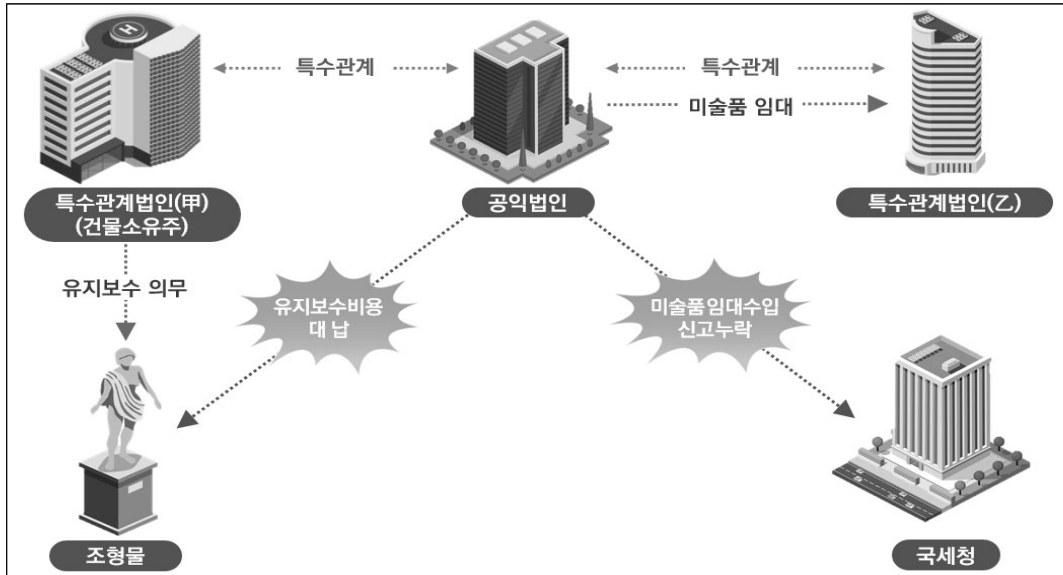
사례 5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
공익목적 외 사용	가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사적 사용)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익법인의 前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례 6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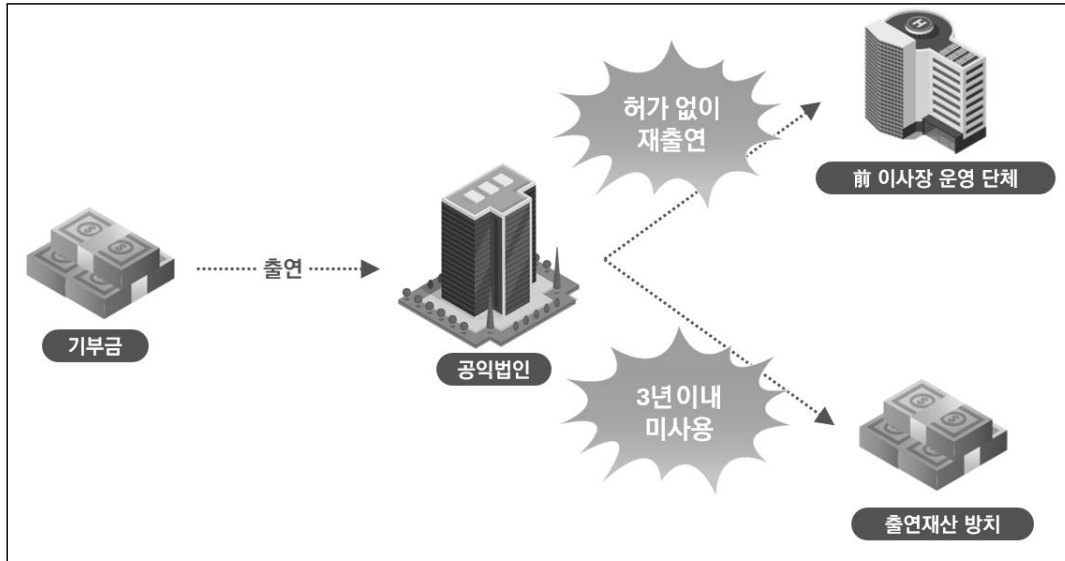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조형물 관리비 부담 지출)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
-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甲법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게 대납한 혐의
- (임대수입 과소신고)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乙에게 미술품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



사례 7 기부금 재출연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
	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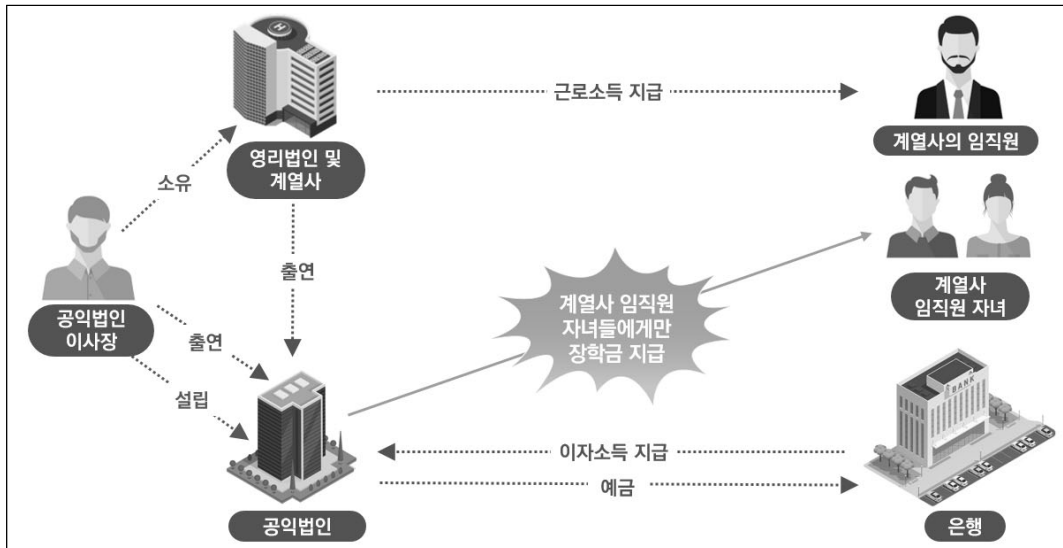


□ 주요 혐의내용

- (허가없이 기부금 재출연)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前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

**특정계층
혜택제공**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제공



□ 주요 혐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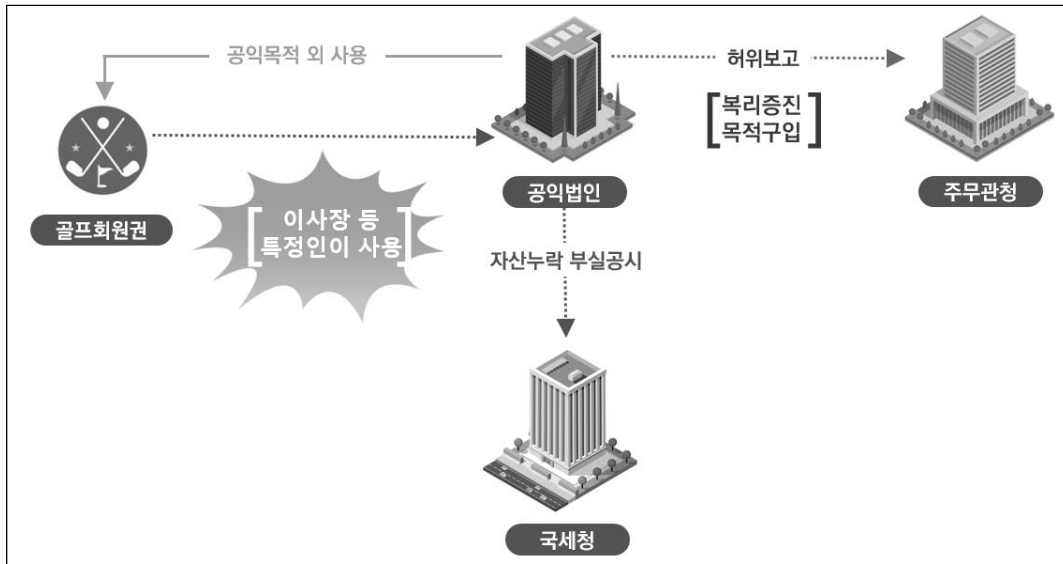
- (특정계층 혜택 제공)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
 -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사례 9

공익자금
사적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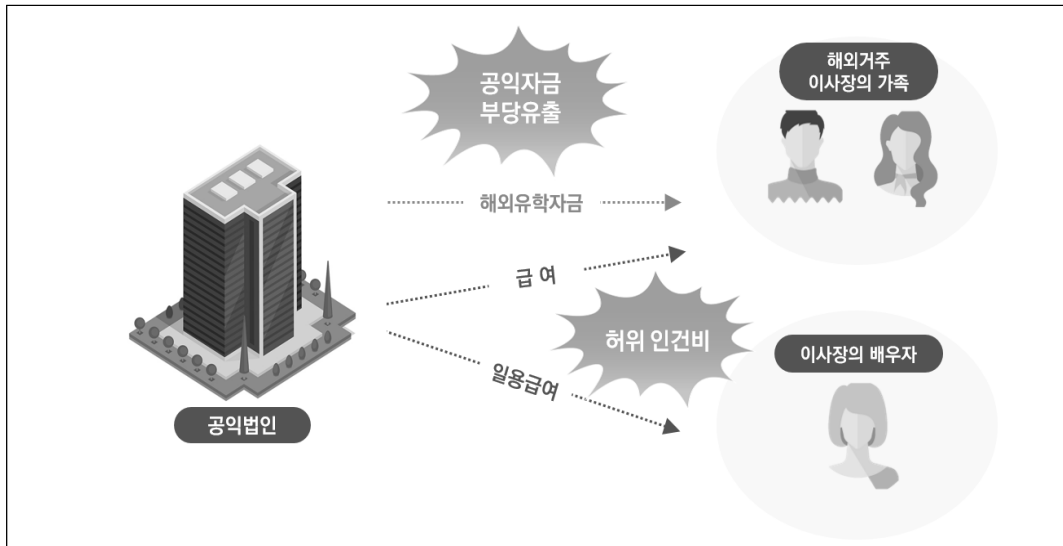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
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
- (공시 누락)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하여야 함에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하여 불성실 공시 혐의

<p>사례 90</p>	<p>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p>
<p>공익자금 사적유용</p>	



□ 주요 혐의내용

- (해외 유학자금 지출)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담 지출
 -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 (허위 인건비)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술인정 사전신청

— 국세청, 2023. 8

'23년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올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35%(중소기업 기준)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제도 개요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적용대상·공제액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 특정 시설·업종 관련 유·무형자산에 투자
-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 (국가전략 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10%	5%	1%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12%	6%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21.7.1.~'24.12.31)	16%	8%	8%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은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의 2배 한도 적용

●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업종 유·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 사유발생시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 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

2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만 한시적 공제율 더 크게 적용)

● 제도 개요

- 투자촉진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최고 13%p 더)을 상향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

● 적용대상 · 공제액

- 2023년 투자한 금액 (2022년 이전 투자분, 2024년 이후 투자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제외)
 - 대상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
- 총 공제세액 = (2023년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3년 평균대비 증가분
일 반	12%(+2p)	7%(+2p)	3%(+2p)	10%(+7p)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18%(+6p)	10%(+4p)	6%(+3p)	10%(+7p)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24.12.31.까지)	25%	15%	15%	10%(+6p)

● 공제율 예시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 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35%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 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8%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 23년에 투자시 투자액의 최고 22% 투자세액공제율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3-1)

● 사례 1

-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면서,



- 2023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20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

구 분 (단위 : 억원)	2023년 투자분 공제액			2024년 투자 분 공제액			2년간 공제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23년 추가투자 시	90 1,500×6%	50 500×10%	140	30 1,000×3%	-	30	170 (50↑)
24년 추가투자 시	60 1,000×6%	-	60	45 1,500×3%	15 500×3%	60	120

⇒ 23년에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23-24년 2년동안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 적용
 24년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50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4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3-2)

● 사례2

-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

구 분 (단위 : 억원)	2023년 투자분 공제액			2024년 투자 분 공제액			2년간 공제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23년 추가투자 시	36 200×18%	10 100×10%	46	12 100×12%	-	12	58 (13↑)
24년 추가투자 시	18 100×18%	-	18	24 200×12%	3 100×3%	27	45

⇒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23-24년 2년동안 총 58억원의 세액공제 적용
 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13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5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3-3)

● 사례3

- 중소기업 C사가 일반 사업용자산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 2023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20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적용

구 분 (단위 : 억원)	2023년 투자분 공제액			2024년 투자 분 공제액			2년간 공제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계	
23년 추가투자 시	24 200×12%	10 100×10%	34	10 100×10%	-	10	44 (9↑)
24년 추가투자 시	12 100×12%	-	12	20 200×10%	3 100×3%	2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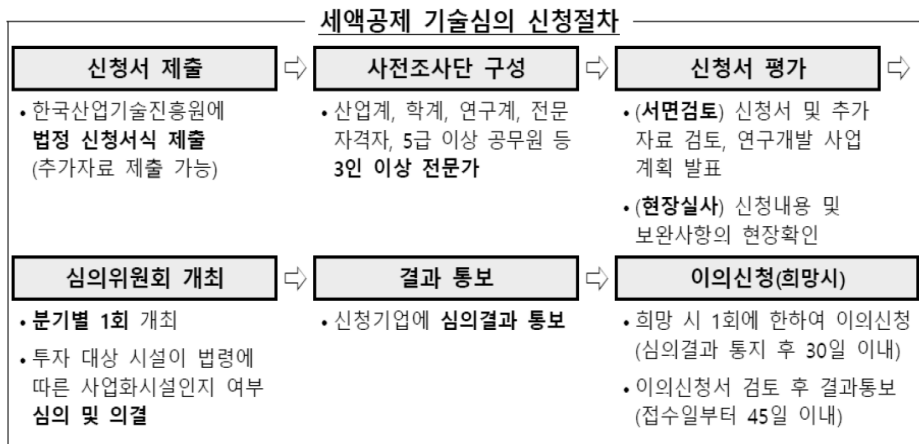
⇒ 23년에 1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23-24년 2년동안 총 44억원의 세액공제 적용
24년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9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

6

사전 세액공제 신청, 후 기술 인정(조특령§21⑩, 조특칙§13)

● 제도개요

-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23년부터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뒤, 후 시설인정 가능
 - 세액공제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인정 신청 (상시 접수 중)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외)에 걸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 시설 인정 신청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https://taxcredit.ki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상시 접수
 - (신청서류 첨부) 알림마당 → 신청서류 자료실
- 기술인정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고_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 운영 세칙)

서식명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1. 인정 신청서	O	O
2.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O	O
3. 시설투자 명세서	O	O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기획재정부, 2023. 9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 '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및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개요

① 배경

-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 필요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② 제도 개요

-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공시 방법) '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3.10.1.~11.30.) 중에 공시
-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I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 국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납세자는 그동안 카카오페이를 통해 확인하던 국세 안내문을 앞으로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의 모바일 앱(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pLay)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19년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하였으며 '22년까지 총 76백 만건을 발송하여 214억 원의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 '23년 8월말부터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문서 도착 시 알림(푸시), 이메일 등의 다양한 경로로 알림을 발송하며, 전자문서를 기한 내 확인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2번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KB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카드(신한pLay)도 전자 문서 도착 시 알림(푸시)을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의 검증된 보안 시스템을 바탕으로 앱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국세 안내문을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문자사기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고·스팸 안내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통신 3사(KT·LGU+·SKT)의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9월부터는 문자메시지(MMS) 기반의 모바일 안내문에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와 안심마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차세대 문자(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 개요 |

- 스팸·문자사기 등 사칭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RCS*에 안심마크와 안심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 (과기정통부·SK텔레콤·삼성전자 등이 협력하여 제공)
- * 국제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정의한 국제표준 메시지 규격(RCS)
- ** 기업브랜드 로고와 안심문구를 포함하여 발송함으로써 문자사기 등을 방지

- 안내문에 ❶국세청 로고와 ❸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있으면 스팸·문자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III

모바일 안내문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분들은 홈택스(손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를 하면 종전과 같이 종이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 2023. 8

-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를 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1

신청 편의 제고 노력

①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됩니다.
 -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 명 중 안내대상인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3.9.1.~9.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노인일자리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안내

- 이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인력은 전년 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하고, 문의 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 2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9.1.~15.(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④ 장려금 관련 스팸 문자 차단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

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 또한,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 문자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추가로 차단하겠습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참조)

-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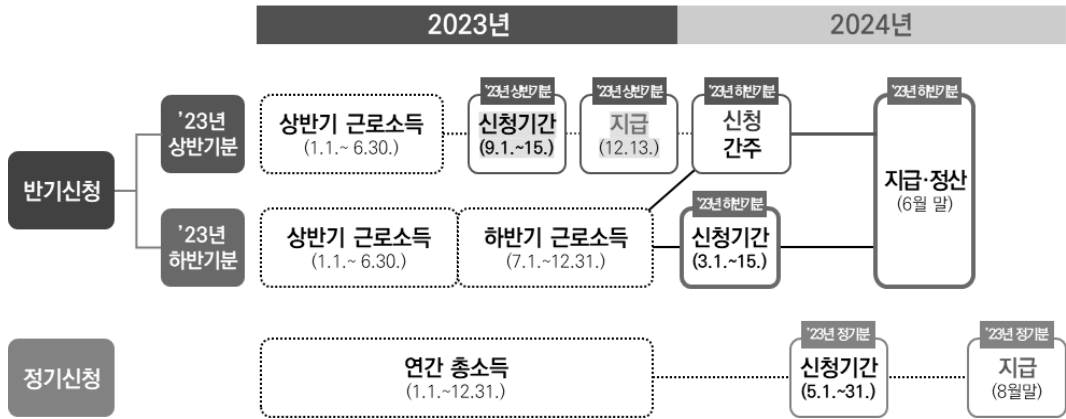
구 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 ~ 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2. 6. 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 6. 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3.1 ~ 3.31.) 또는 5월 정기신청('24.5.1 ~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4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 토스뱅크 ·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 · 모바일 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고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우편 안내문

-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③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대리」 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홈택스(PC ·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